



김민석 국무총리 -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14일(수) 08: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김민석 국무총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이달 말 발의... “당론 법안”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근거가 될 특별법안 발의가 1월 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촘촘한 법 조문 완성을 위한 조치로, 법안은 사실상 당론 법안으로 2월 말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에 따르면 당초 이르면 15~16일로 예상됐던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가 1월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양대 축으로,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균형발전기금 조성, 산업·기업 유치 인센티브 등 280여 개에 이르는 특례를 빈틈없이 준비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 교육청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관련 정부 부처, 정치권과의 밀도있는 논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당초 15~16일에서 2주가량 연기... “공론화 후 당론으로”
 “완성도 높이기 위한 것... 2월 말 본회의 상정은 문제 없어”

선 최소 2주일 가량의 속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렸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의원은 “시·도청과 양 교육청에서 올린 초안 성격의 법안 건의사항을 토대로 실제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무얼 담아야 할지, 정부 부처와의 협의와 조율, 국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두루 거쳐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선 기밀한 조율이 필요해 법안 발의는 1월 말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한 많은 특례를 담으려는 지역 정치권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정 칸막이’를 고려하는 정부 부처와의 의견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도 읽힌다.

안 의원은 “국회 공청회에 이어 특례 조항 등 특별법에 대한 국무총리 브리핑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논의되거나 발표된 내용이 입법지원단 회의에

서 충분히 고려해 마지막에는 특별법에 담지 않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양 교육청의 통합 관련 특별법안 건의안은 초안 형태로 이르면 이날 안으로 안 의원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도 이날 오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어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수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통합”이라며 “방향, 내용, 속도, 결의 모두 중요한 만큼, 며칠 내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전남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약속한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기업 유치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촘촘히 마련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의 초석이 될 특별법안은 최종 손질을 앞둔 가운데 총 8편 24장 317개 조문 281개 특례로 채워져 있다. 앞서 추진된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총 7장, 21절, 296개 조문, 257개 특례로 구성됐다.

한편 특별법 발의와 제정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는 총리 브리핑에 맞춰 전남 시장군수 상생협의회, 행정통합 추진 범시민협의회 발족(이상 16일), 지역별 순회 공청회(19~31일),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 청취(1~2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뉴시스

광주시, 폭염·열섬 대응 도시숲 10곳 만든다

국비 13억 등 총 20억 투입... 시민체감형 녹색복지 강화

광주시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도시열섬과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도시숲 10곳을 새로 만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총 사업비 20억6000만원(국비 13억, 시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저감숲과 녹색복지숲 등 2개 분야 도시숲 10곳을 조성한다. 이는 도심 열기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여 ‘ 시원한 푸른 광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산림청 등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도시숲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사업으로 3개 사업 9곳에 20억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과 주민 이용 편의를 고려한 ‘녹색복지숲’ 조성 사업으로 1개 사업 1곳에 6600만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저감숲 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동구 필문대로, 서구

동암동 경관녹지, 남구 효천3로, 남구 유안근린공원, 광산구 수완동 보행자 전용도로 등 5곳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남구 방림초교, 남구 월산초교, 광산구 선운초교 등 3곳 ▲생활밀착형숲(실외정원) 조성사업 북구 전남대학교 1곳이다. 또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은 광산구 보림의 집 1곳이다.

광주시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고, 폭염 때 체감온도를 낮추는 한편 미세먼지 차단,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 체감형 녹색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 규모의 적정성,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전광훈 기자

전남도, 세계로 도약할 2026 대표축제 10개 선정

최우수 ‘장흥 물축제’ 등 경쟁력 강화위해 집중 육성키로

전라남도는 시군 대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흥 물축제 등 10개를 ‘2026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 세계로 도약하도록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표축제는 ▲최우수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우수 ‘고흥 유자축제’, ‘보성다향대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유망 ‘목포항구축제’, ‘공양매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해운고인돌 가을꽃 축제’, ‘해남미남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다.

축제심의위원회는 축제·관광·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성, 관광객 유치 가능성, 콘텐츠 완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도심을 흐르는 탐진강을 활용한 대규모 참여형 물놀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전국적인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태극 ‘송크란 물축제’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축제 연계 가능성을 보여줬고,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철저한 안전관리, 야간 체류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가 뚜렷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국화를 중심으로 한 고품격 전시와 체험·공연 콘텐츠를 균형 있게 구성해 축제 완성도를 높였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을 고려한 공간 연출과 안정적인 운영이 강점으로 꼽혔다.

‘고흥 유자축제’는 유자밭을 활용한 체험·감성형 프로그램과 유자 조형물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고흥 유자의 브랜드 가치를 효과적으로 구현했고, 유자 생과와 가공품 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주민 주도형 운영 구조가 높다.

전남도는 대표축제로 선정된 10개 축제에 최우수 5천만 원, 우수 3천만 원, 유망 1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신청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염선호 기자

제54회 강진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